

생각의 채널을 바꾸자!

-성평등을 위한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

“우리는 스스로 편견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편견 속에서 많은 판단을 하지요”

- 말콤 글레드 웰

편견 (prejudice)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하여 그것에 적합하지 않는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이나 의견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느 사회나 집단에 속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대상(특히 특수한 인종이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직하는 **나쁜 감정**,

부정적인 평가, 적대적인 언동의 총체이다.

폭력예방 감수성 향상 교육의 목적

왜곡된 성 통념
바로 잡기

사회 안전망
구축

피해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한
지원

폭력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

2차 피해 예방

아래의 용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성희롱 (sexual harassment)

- 어떤 관계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 누가 : 공공단체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 무엇으로 :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 어떤 피해 : 성적 굴욕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관련법1 :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

관련법2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관련법3 : 남녀고용평등법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 2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

사회통념의 고려

-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형사에서 ‘불기소’가 나왔는데, 성희롱으로 징계가 가능한지?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성희롱으로 징계가 가능한지?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강간 등 사건 판결)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대학교수와 학생간의 사건

- 대법원 0대 성희룡 교수 해임 사건
- 2017두74702/2018년 4월 12일 선고

- 가해자: 대학교수/ 피해자: 학과 제자

- 소송 내용:

제자를 성추행 한 일로 해임된 교수가 징계 결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교원평가 성희롱' 고등학생 퇴학

익명으로 진행한 교원평가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적 답변을 적어낸 한 고등학생이
검찰로 넘겨지고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도 이달 초 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 군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희롱피해를 입었다면?

1. 불편함을 드러내고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2.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믿을만한 주변인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4. 직장내 성희롱 발생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합니다.
5. 필요한 경우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합니다.

성희롱피해를 알게 되었다면?

“그때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래?”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사람(행위자)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당신의 성격이나 태도에도 문제가 있어”

2차 피해

1.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이도록 노력한다
2.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3.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건의 원인을 돌리지 않는다
4. 사건을 당사자의 평소 행실, 업무능력, 성격 등과 관련 지어 말하지 않는다
5.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는다

피해를 즉시 드러내지 못했다 해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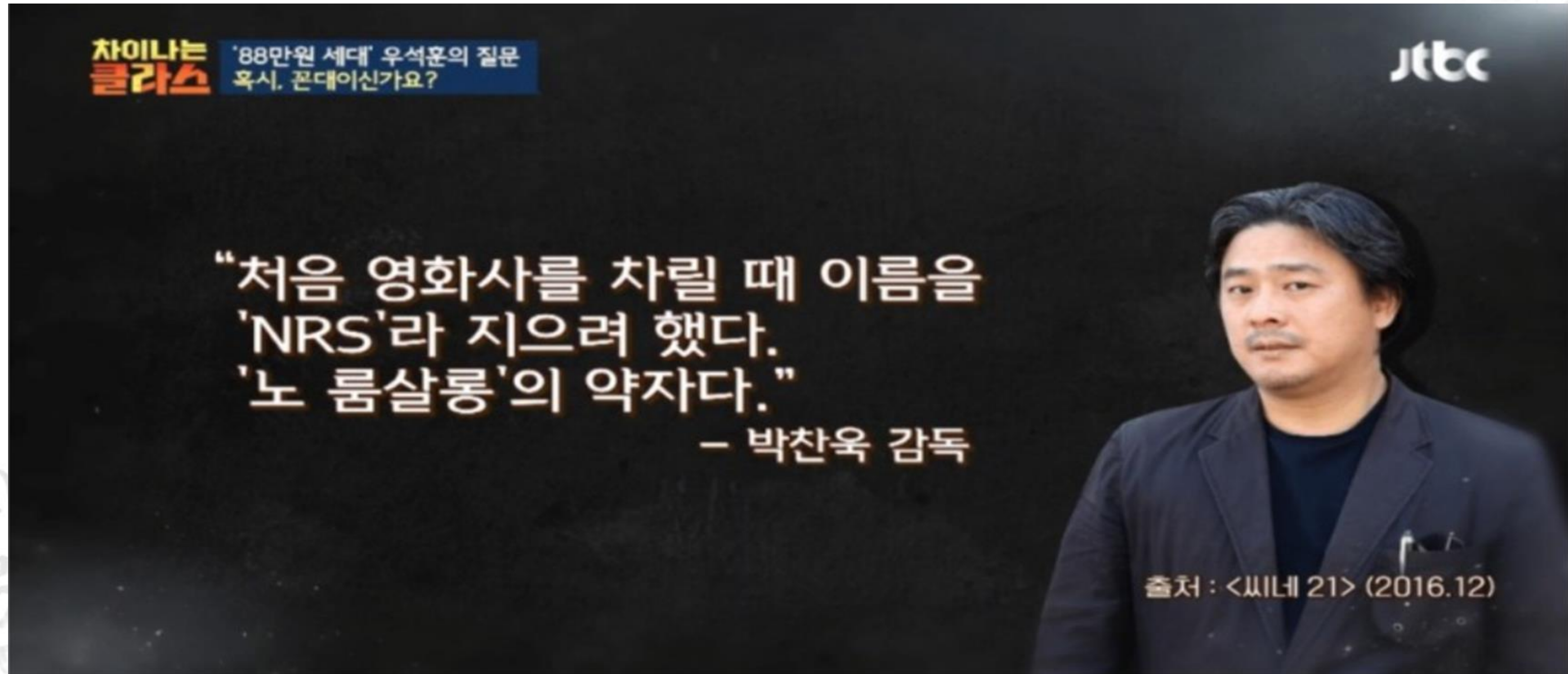
"성매매도 인신매매"...인신매매 개념 넓힌다

제1차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 발표...5년마다 정책 수립

피해자 식별지표 고시...상담전화·권익보호기관 신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힌 것이다.

봉준호, 박찬욱, 류승완 감독 때문에 영화계 룸살롱 접대 문화가 없어졌다?!



성매매에 대한 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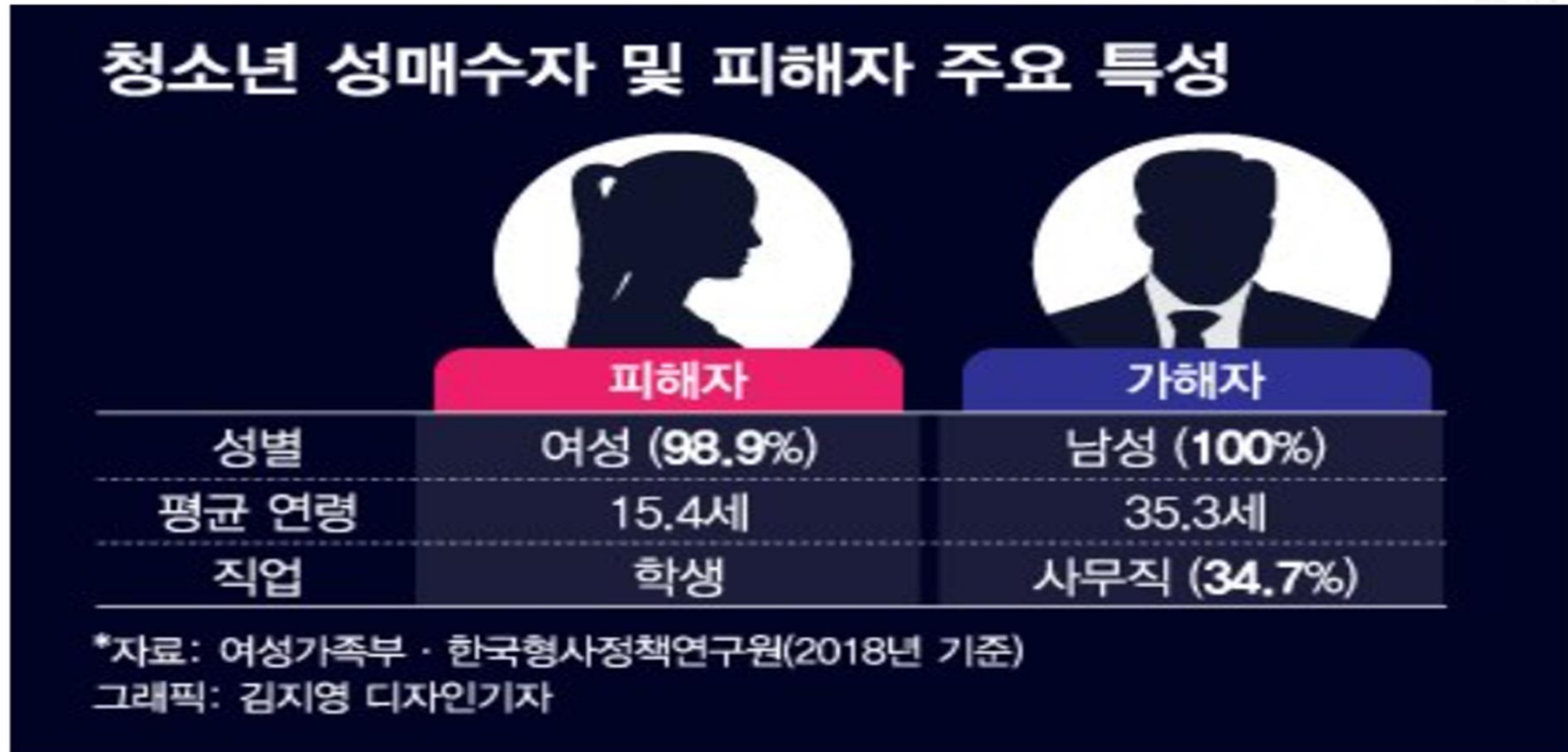
‘성매매 기록 수집’…개인정보 5천만 건 판매해 온 일당 검거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6,400여 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업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5,100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매매 업주들이 이들이 만든 앱을 설치하면, 이용자들의 과거 업소 이용 기록과 성적 취향 등 개인정보가 화면에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앱은 성매매 업소 뿐 아니라, 애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탐정’ 등에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성매수자 및 피해자 주요 특성



정부 센터 찾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절반이 14~16세

피해자의 연령은 14~16세가 45.6%로 가장 많았다. 17~19세가 36.4%였고, 20세 이상은 9.5%였다.

10~13세 피해자도 6.2%(53명)나 됐다. 피해자는 여성이 98.3%였다. 장애인 피해자는 7.5%(65명)였

다. 학력별로는 중졸이 35.5%로 가장 많았고, 초졸(35.2%) 고졸(11.6%) 순이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

지 않은 무학력자는 1.9%였다.

미, 2년 연속 '한국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는 한국에서 인신매매범들이 가출한 아동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착취하고 있으며 필리핀 등 여러 아시아 국가 여성들에게 거짓으로 공장 일자리 등을 약속한 뒤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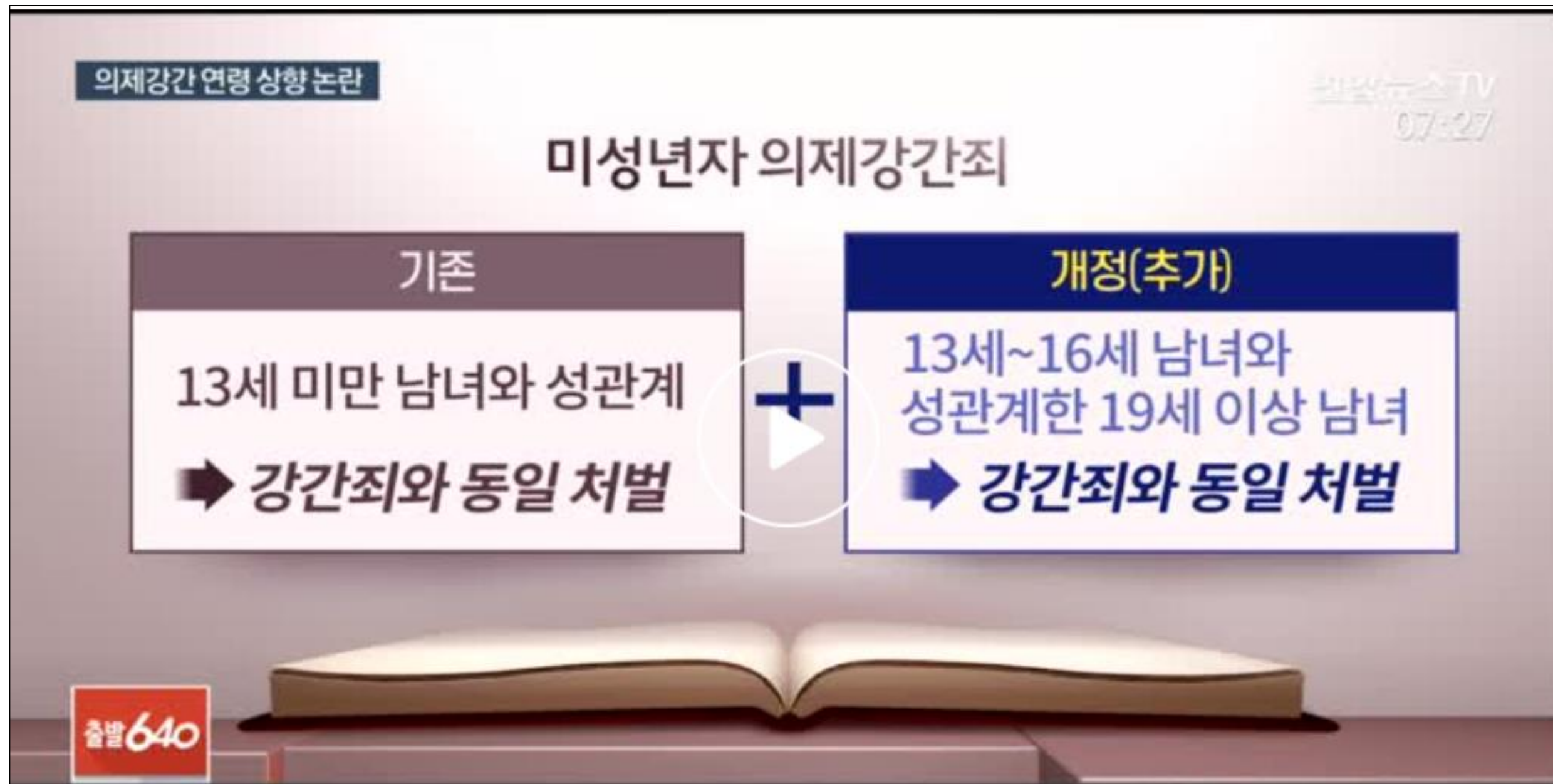
보고서는 또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결혼을 빌미로 모집된 여성들이 실제로는 강제 노동과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성매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해 회복·지원

그동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 등 신고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성매수자와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성 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은 성매매에 관계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가능해졌다…아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수사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에스엔에스(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여성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가해자가 신체 촬영물이나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엔(n)번방 등 성범죄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해왔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겨레 2021-02-26

채팅앱서 '성매매' 제의하면, 경찰 나온다

‘가출 여고생인데 재워주실 분?’

채팅앱에서 이런 문구를 보고 ‘성매매’를 제의했다간, 약속 장소에서 경찰관을 만날 수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채팅앱 등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을 가장해 계정을 만들어 ‘잠복’할 계획이다. 이를 보고 누군가 메신저나 쪽지로 성매매를 제의하면 즉각 모든 과정이 증거로 수집된다. 만남 일시, 장소, 조건, 연락처 등 증거가 충분히 모이면 경찰은 신원을 밝히고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알린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복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까지 할 계획이다.

佛 '성매수자만 처벌' 법안 의회 통과, 유럽 성매매 규제 강화

프랑스에서는 성을 매수한 사람을 초범의 경우 1천500유로(200만원 상당), 재범과 누범의 경우 최대 3천750유로(48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성 매수 남성에게는 성매매 예방 교육도 명령합니다.

"성 매수자가 없으면 매춘도 없어지고, 인신매매도 없어집니다." (조프루와/ 국회의원)

다만,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제매춘에 동원된 사람의 성을 매수하면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성매매 합법화로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성을 사는 사람들만 처벌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권력(돈)에 의한 착취이자 인권침해

- 스웨덴은 성구매자만 처벌(‘노르딕 모델’)
- 성판매자가 사회구조적 모순에 의한 비자발성인 반면, 성구매자는 완전히 자기 의지에 의한 자발적 행위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
- 성 판매자의 대부분은 비스웨덴 여성
- 스웨덴 내에서 성을 파는 여성들 중 동유럽 계열이 60%를 조금 넘고,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성이 25% 내외, 남미 여성이 10% 내외를 이루고 있고, 스웨덴 여성은 0.1%를 넘지 않는다.
- 이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범죄 조직에 의해 스웨덴으로 유입

노르딕 모델 효과

노르딕 모델 효과

매우적절

: 성구매 경험 13.6% → 8.0%

: 성판매자 최대 75% 이상 감소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각 국가들이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 * Förbud mot köp av sexuell tjänst En utvärdering 1999-2008 보고서
- *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nd its impact on gender equality 2014

감사합니다.